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 회복 나선다… 고소득 업종 ‘제동’

신규 가맹점 66% 고소득 업종
온누리상품권 ‘사각지대’ 논란

가맹점 등록 매출 제한 기준 등
공정성 개선 위한 법률안 논의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온누리상품권’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된다. 기존 법안에 매출 제한이 없고 법률적 사각지대도 많았던 만큼,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하고 매출 기준도 마련해 그 수혜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하고,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의 가맹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전통시장과 지역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발행 형태에 따라 5~15% (지류 5%·디지털 10%, 명절기간 5% 추가 할인)의 액면가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주기적으로 5~15%의 페이백(부분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액면가 대비 실질 할인율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특별법에 관심이 쏠린다. 지류 온누리상품권. /뉴시스

은 최대 30%에 육박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제도 개선이 논의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온누리상품권이 당초 정책 목표와 다르게 고소득 영업장과 대형 유통업체로 흘러가고 있어서다. 중기부는 지난 9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지난달에는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폐업 후 미신고나 외부 영업 등으로 가맹점 지위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는 총 5조5000억원으로 설정됐다. 지난 2021년 3조원 규모에서 4년 만에 2배 가깝게 늘었다. 적극적인 판촉 전략과 가맹 홍보에 디지털온누리상품

권 가맹점 수도 1450만 곳으로 늘어, 올해 초와 비교해 9배나 급증했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 혜택은 당초 정책 목표인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허용 업종 확대 조치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은 학원·병원·약국·노래연습장 등 업종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졌는데, 오세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허용 업종 확대 조치 이후 1개월 동안 등록된 신규 가맹점의 66.3%는 고소득 사업자였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은 고가 주류나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내 대형 식료품 매장 등에서 우회적으로 판매하는 등 정책적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유통량 대부분이 학원·보건업·대형유통업체 등 전통시장 바깥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올해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전액 소진됐다. 중기부는 지난 10일 예산 소진을 이유로 온누리상품권(지류·디지털)의 할인 판매를 중단했다. 2009년 온누리상품권 출범 이후 관련 예산이 소진된 것은 처음이다. 연말 ‘소비 대목’을 앞둔 만큼, 온누리상품권 예산 소진은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온누리상품권은 가격 혜택이 큰 만큼, 소상공인 매장과 대형 유통업체와의 가격 경쟁력 차이를 매꿔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연말 수요에 맞춰 상품을 발주해야 하는데, 할인이 갑작스레 사라져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고, 매출에 대한 걱정도 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법률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혜택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발행량이 확대돼 내년에도 5조5000억원이 발행될 예정이지만, 가맹점의 상당수는 전통시장 상인보다 매출 규모가 큰 점포로 구성됐다”라면서 “매출 기준 명확화와 정보연계 체계를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본래 취지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지난 15일 자이갤러리에서 진행된 ‘자이안데이’ 행사. /GS건설

GS건설

자이 리브랜딩 1주년 고객초청 이벤트 진행

GS건설은 자이(Xi)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브랜드의 변화를 고객들이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고객 참여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15일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기존 입주단지 고객들 중 주침을 통해 선발된 50여명을 초대해 ‘자이안 데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리브랜딩 이후 변화한 자이(Xi)의 프리미엄 커뮤니티 콘텐츠를 기존 고객들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움과 파르나스호텔이 함께 참여해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강연과 와인 시음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리브랜딩 1주년 기념 그림 그리기 공모전 ‘내가 그린 자이 그림’도 진행했다. ‘미래의 자이’와 ‘자이만의 공간’을 주제로 아파트에서 사는 삶 속에서 영감을 받은 특별한 일상과 경험을 자유 형식으로 표현하는 고객참여형 이벤트다.

공모전은 자이(Xi) 브랜드 웹매거진 ‘비욘드에이(BEYOND A.)’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그림과 AI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공모전에서 약 800여점의 작품이 출품됐고, 그 중 대상 1명 포함 총 11명을 선정해 수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수익 막힌 카드업계, 스테이블코인 신사업 만지작

8개사 발행 상표권 158개 달해
추가행보 없어 전략 실효성 논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카드업계가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17일 지식재산정보 검색 시스템 키프리스(KIFRIS)에 따르면 삼성카드를 제외한 주요 8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은 총 158개에 달한다.

여신금융협회도 앞서 9개 카드사와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공동 출원했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 도입 본격화와 흐름에 따라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 인프라 구축 마련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으로 카드사들의 부진한 수익성이 지목된다. 실제 카드



서울 소재 한 음식점 입구에 결제가능 신용카드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시스

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출 규제 등으로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핵심 수익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수익원 창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표권 출원 이후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표권 출원 시기가 약 2~3개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행보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

계자는 “업계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전문가도 부재하고, 인프라 구축도 아직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고 설명했다.

해외 카드사들은 스테이블 코인 연계 카드를 출시하면서, 이미 스테이블코인 신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카드사인 비자(VISA)는 남미·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출시한다. 스테이블코인 결

제 플랫폼인 브릿지(Bridge)와 협력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칠레 등 6개국에서 우선 선보인다.

마스터카드 역시 디지털자산 거래소 ‘오케이엑스(OKX)’, ‘크라켄(Kraken)’, 디지털자산 핀테크 ‘문페이(Moonpay)’와 제휴를 맺고 미국, 영국, 유럽 지역에 스테이블코인 카드를 출시한다. 또 지난 4월 판매자가 판매 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산받을 수 있도록 서클(Circle)과 캐나다 핀테크 누베이(Nuvei)와 제휴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 영역을 카드 결제에서 기업 간 거래(B2B) 정산 부문까지 넓힌 것이다.

하나금융연구소 유승원 연구원은 “국내 카드사들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환경 변화 및 시장 기회를 꾸준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이억원 “국민성장펀드, 정부·기업·국민의 잠재력 극대화”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기업·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일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헌관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 간 맺어진 것으로 5개지주와 산업은행이 프로젝트별로 자금지원에 협력하고, 전문인력을 파견해 첨단전략산업의 지원 검토사업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금융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정부·산업계·금융권이 함께 첨단산업의 미래와 비전에 깊이있게 고민하고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추진 전략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유망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에도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지원방식과 협업체계도 그간의 산업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면서 “기존의 영업관행과 마인드는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출자부담 개선 방안, 발생할 수 있는 투자실패에 대한 면책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돕겠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안재선 기자